

생보사, 암 보장 특화상품 '업계 최초' 전장

포화상태 암보험 신상품 잇따라 한화, '암 주요 치료비' 10년 보장 삼성, 항암 후 각종 질병·재해까지 미래에셋, 단일유전자 검사 보장

생명보험사들이 암 보장을 확대한 상품 및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업계 최초·유일 보장'이란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포화 상태인 암보험에 새로운 전운이 감돌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1일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을 출시했다. 업계 암보험 트렌드인 '암주요치료비' 보장을 업계 수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신상품이라 평가다.

'암주요치료'란 고객이 암 진단 후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한화생명은 암주요치료비의 지급보장기간을 업계 최초로 10년(타사 5년)으로 확대해 전이암과 재발암까지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지급보장기간과 최대지급금 액도 2배로 확대·증대됐다.

이 상품의 주요 특약은 '암주요치료 보장특약'과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생명보험업계가 암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유토이미지

지원특약'으로 나뉜다. 한화생명은 해당 특약으로 암주요치료비로 10년 동안 최대 12억원을 보장한다. 암주요치료보장특약과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지원특약은 각각 최대 2억원, 10억원을 지급한다.

NH농협생명도 한화생명에 이어 '암플러스NH치료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암 진단 확정 이후 10년 동안 보장하는 조건은 비슷하나 최대 보장금액이 10억원으로 한화생명(12억원)보다 낮다. 대신 NH농협생명은 실손의료비처럼 매년 최대 1억원씩 10년 동안 보장하는 새로운 컨셉의 암보험이라고 강조했다. 진단금 1회 지급 후 소멸하

는 기준 암보험과 달리 매년 보장금액이 최대 1억원씩 리필 보장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암플러스NH치료보험은 1회성 진단보험금으로 끝나는 기존 암상품과 달리 암 치료 보장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매년 증가하는 암치료비에 대비하기에 최적인 암보험"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18일부터 암 치료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 '다(多)모은 건강 보험 필요한 보장만 쑥쑥 S3'를 판매한다. 특히 다양한 특약으로 각종 질병의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해 삼성생명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삼성생명은 암 치료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항암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재해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항암약물·방사선치료후 72대 질병 및 재해보장' 특약은 업계 최초 항암치료후 발생 가능한 72대 질병 및 재해를 보장한다.

미래에셋생명은 항암치료 전후에 필요로 진단 및 부작용 치료 특약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급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보장특약', '급여 특정항암부작용 치료약제보장특약'으로 생명보험협

회로부터 각각 3개월,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혁신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차세대 비유전자 검사에 대해 기존 NGS 유전자 패널 검사뿐 아니라 업계 최초로 단일유전자 검사도 보장한다. NGS 유전자 패널 검사의 본인부담률이 지난해 12월 기준 50%에서 80%로 상향하면서 단일유전자 검사의 현장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특약 신설로 수요가 증가할 단일유전자 검사를 보장하면서 보장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개인별 환자의 유전자 변형을 확인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는 차세대 비유전자 검사 시 기존 NGS 유전자 패널 검사뿐 아니라 업계 최초로 단일유전자 검사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며 "일부 암종의 경우 시간과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단일유전자 검사의 현장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장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KB손해보험 희망퇴직 실시 건강검진비 등 인생 2막 지원

KB손해보험은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KB손해보험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적합한 인력 구조를 통해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기업 가치를 실현하고 직원에게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은 오는 19일부터 희망자를 접수 받아 7월 31일자로 퇴직 발령 예정이다.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3년 만에 실시하는 이번 희망퇴직으로 KB손해보험은 새로운 인재를 채용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젊고 역동적인 환경으로 '변화'와 '혁신'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만 45세 이상 및 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 ▲근속 연수 20년 이상 직원인 경우다. 임금피크제 기진입자 및 예정자도 포함된다. 희망퇴직 조건은 월급여(연급여의 1/12)의 최대 36개월 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로 생활안정자금, 전직지원금 또는 학자금,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과 희망에 따라 재고용(계약직)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용(계약직) 프로그램은 회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도전의식을 갖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고용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인력구조의 고령화, 고직급화로 역동성이 낮아지고 직원 개인의 동기부여가 약화되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활기 있는 인력구조를 위해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 1면 '수도권 주택 2만가구…'서 계속

공공매입임대 주택 하반기 5.4만호 공급

최 부총리는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PF 정상화도 꾀한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그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며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

수수료 부담 vs 편의성 증대… '보험료 카드납' 대립각

〈보험업계〉

〈카드업계〉



쳇.GPT에 의해 생성 된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 이미지

잔액(16조358억원)의 5.64%를 차지한다. 이어 손보사의 자동이체 대비 카드 납부 비중은 17.39%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 납부 비중이 높아지면 수수료율을 만큼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보험료 카드납은 금융상품을 신용으로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식과 현금을 신용카드로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수수료율을 두고 '대립각'이 있지만 카드업계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 적용하는 기준을 일괄적용했을 뿐 보험사에만 별도의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카드 업계가 팽팽한 대립구도지만 '각자도생' 분위기다. 개별사간 제휴를 통해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속도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는 제휴 카드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최근 보험사와 카드사의 협업이 이뤄진 곳은 DB손해보험과 우리카드다. 중대재해배상보험 비대면 플랫폼을 공개했다. 우리카드 기업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보험업계와 협을 힘을 합쳤다. 삼성카드는 '삼성 iD VITA 카드'를 출시했다. 의료비와 헬스, 뷰티 영역에서 20% 할인을 적용하고 보험료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매월 보험료를 1만원씩 아낄 수 있다. 롯데카드는 라이나생명과 메리츠화재와 손을 잡았다. '보험앤파크 시리즈 2종' 출시를 발표했다. 전월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2만5000원 할인한다.

한편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8년간 계류법안에 머물다 파기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간 관련 상품을 공격적으로 출시하는 흐름이고 제휴 확대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며 "입법을 하더라도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2만건 유탁 '전세사기' 피해… 3억 미만·청년층 집중

지난달 1496건 피해자 등으로 가결 수도권 60.7%, 다세대 31.9% 달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에 유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대부분 임차보증금이 3억원 미만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를 열어 총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누적으로 총 1만962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내국인이 98.4%를 차지했다. 대부분 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으며, 수도권의 비중이 60.7%에 달했다.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1.9%)과 오피스텔(20.9%), 다가구(18.0%)에 거주했고, 아파트 비중도

14.5%로 낮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73.64%에 달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 보증공사(I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